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12



방송통신위원회

☐☐ 목 차 ☐☐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6
III. 2022년 핵심 추진과제	8
IV.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8
【붙임】 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19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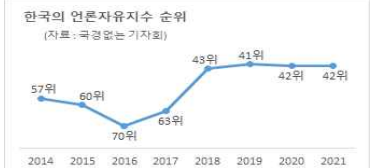
1. 주요 정책성과

① 미디어의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 추진실적

- ① **(재난방송 강화)**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19.5월), 사회재난 재난방송 실시기준 마련(‘19년 미세먼지·산불 등, ‘20년 감염병), 주관방송사 수어·외국어 자막 의무화(‘20.3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수립(‘21.8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구축(‘21.11월)
- ②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를 도입 17년 만에 20개 신규 허가(‘21.8월, 7개사→27개사)
- ③ **(조건·법 위반행위 엄정 대응)** 재허가 재승인 조건 미이행 방송사 시정명령*, 방송법을 위반하여 승인·재승인을 받은 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20.10월)
* 사업계획서의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한 채널A·MBN·광주방송 등(‘19.1월, ‘20.10월), 협찬사실 고지 조건 위반한 채널A·MBN·JTBC(‘21.11월) 등 시정명령
- ④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견서’ 마련(‘18.12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면접절차 신설(‘21.8월)

□ 정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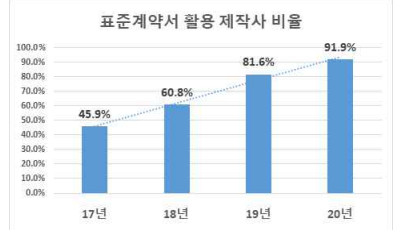
- ① **(언론자유지수 상승)**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대언론 원칙 이행 결과 언론자유지수가 ‘17년 63위에서 ‘21년 42위로 상승(‘19~‘21년 아시아 1위)
- 
- | 연도 | 순위 |
|------|-----|
| 2014 | 57위 |
| 2015 | 60위 |
| 2016 | 70위 |
| 2017 | 63위 |
| 2018 | 43위 |
| 2019 | 41위 |
| 2020 | 42위 |
| 2021 | 42위 |
- ② **(국민중심 방송서비스 제공)**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 지역방송 활성화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20개社)를 통해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밀착형 미디어 문화 확산
※ 재난방송의무 요청 건수 : (‘16) 237건 → (‘21.11월) 808건
 - ③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제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 제작·편성 환경 조성을 통한 방송사 파업 등 갈등 최소화
※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해직자 전원 복직(‘17.12월)

② 공정·상생의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추진실적

- ① **(인앱결제 강제금지)**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행(‘21.9.14)
- ② **(지상파·중편 차별규제 개선)**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중편 적용(‘19.6월), 방송통신발전기금 동일기준 적용(‘19.8월), 중편 의무송출 규정 폐지(‘19.12월)
- ③ **(국내의 사업자간 차별규제 해소)**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19.3월) 및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19.12월)
- ④ **(외주제작 상생환경 조성)** 외주제작 환경개선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17.12월)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19.7월) 등 후속조치* 추진
* ‘독립창작자 인권선언’ 선포 및 외주인력 안전 강화를 반영한 방송평가규칙 개정(‘18.11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조건으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부가(‘20.4월·11월·12월) 등
- ⑤ **(공정경쟁 환경조성)**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집중 단속
※ 이동통신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행위 등 과징금(‘18.1월, ‘19.3월, ‘20.7월), 결합상품 해지 제한 행위 과징금(‘19.6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자 차별적 지급관련 시정조치(‘19.10월), 미디어협회의 거래조건 차별행위 과징금(‘20.6월),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회 운영(‘21) 등

□ 정책효과

- ① **(이용자 편의 증가)** 이용자와 앱개발사의 선택권 확대, 중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투자 확대 및 다양성 제고, 구글·아마존 등 32개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으로 국내이용자 고충처리 강화 등
 - ② **(외주제작환경 개선)** 표준계약서 사용 및 서면계약 비율이 증가하는 등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 확산
※ (서면계약서 활용) ‘17년 84.2% → ‘20년 98.8%
- 
- | 연도 | 비율 |
|-----|-------|
| 17년 | 45.9% |
| 18년 | 60.8% |
| 19년 | 81.6% |
| 20년 | 91.9% |
- ③ **(방송시장 불공정 개선)** 방송산업 이해관계자 간 공정경쟁 기준 정립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블랙아웃 등 시청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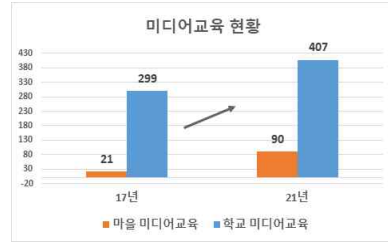
③ 미디어 복지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추진실적

① (미디어교육 확대) 지역 시청자미디어 센터 설립(17년 7개→21년 10개) 및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미디어온' 구축(20.10월) 등 인프라 확충

- 학교·마을·소외계층 등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20.8월)



② (장애인 방송접근권 제고) 시·청각장애이용 TV 무료 보급(연 15,000대) 및 장애인방송(자막·해설·수어) 제작 지원,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연중),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21.10월)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이용TV 누적보급률 : ('19) 83.5%→('20) 99.4%→('21) 100%

③ (이용자보호 강화) 통신분쟁조정 제도 도입(19.6월) 및 통신분쟁조정 서비스의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스톱 처리 서비스 개시(21.1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결제 가이드라인' 제정(18.11월), 통신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고지 의무 강화(19.10월),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시행(20.7월), 모바일콘텐츠 결제·환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1월,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 정책효과

① (미디어교육 활성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인원 증가

※ 미디어교육·체험 인원 : ('19) 20.7만 명 → ('20) 40.2만 명 → ('21) 44만 명

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시·청각장애이용TV 보급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③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신속한 합의 도출

구분	조정신청	조정안 제시	조정전 합의	사실확인 중	취하 등 종료
'20년	572건	306건	123건 ^①	149건	33건 ^②
'21년 현재(11월)	1,063건	456건	313건 ^{①+②}	172건	225건 ^②

※ 조정신청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 '조정전 합의' 및 '취하 종료' 건수는 (538건^{①+②})가 51%를 차지, '20년(156건^{①+②}) 대비 245% 증가

④ 허위조작정보 및 성범죄물 대응 강화

□ 추진실적

①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세계 최초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차단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부과(20.12월) 등 추진

*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카르텔 방지대책(19.1월),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화(19.6월),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20.4월) 등

- 영상물 삭제·상담·수사 관련 24시간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소요기간 단축('16년 10일 이내 → '19년 24시간 이내)

② (불법스팸 차단 강화)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 고도화* 등 기술적 대응, 불법스팸 전송 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 강화('17~'21.11월, 행정처분 4,321건)

* 간편신고 기능 개선 및 스팸데이터 개방(20년), SI기반 분석시스템 구축(~'21년)

③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포털·방송 등을 통한 선제적 정보전파 및 정부·사업자 간 삭제·차단 협조체계 확립 및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종합대책' 수립(21.2월)

* 국민제보 접수(방통위) → 방통위·질병청-사업자 간 핫라인 기반 신속조치 요청 → 사업자 자체 약관·규정 기반 삭제·차단(1,887건, '21.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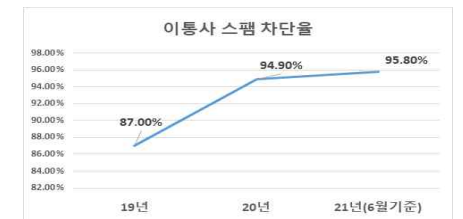
-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factchecker.or.kr) 오픈(20.11월)

□ 정책효과

① (디지털성범죄물 차단 강화) 국제사회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근절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기여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보고서를 통해 모든 UN회원국과 민간부문이 한국의 우수사례를 본받을 것을 촉구('21.6.16.)

② (스팸차단을 향상) 문자, 이메일 등 전체 스팸 발송량 감소, 통신사 문자 스팸 차단을 향상 및 도박·주식·불법대출 사기로부터 국민 피해 예방



③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혼란 예방)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혼란 불식 및 정부방역정책 추진에 기여

5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추진실적

- (낮은규제 철폐)** 48년간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간 차별 없이 허용하고, 광고 총량과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매체 간 동일하게 규정('21.7월)
 - 오락 프로그램·주된 방송분야·1개국 수입물·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완화 및 편성비율 산정기간 간소화 등 편성규제 합리화('21.4월·6월)
- (지상파 UHD 도입 및 확산)** 세계 최초 고화질 UHD 방송 도입('17.5월)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도쿄 하계올림픽 UHD 방송 중계('18.2월, '21.7월)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매년),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19.3월), 방송콘텐츠 국제마켓(MIPCOM) 2020 주빈국행사* 개최('20.10월) 등
 - * 국내 25개 참가사와 글로벌 23개국, 65개사 바이어간 151건의 비즈니스 상담실적 달성(\$10,355,700 규모)

□ 정책효과

- (방송산업 활성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비대칭 규제개선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제작재원 확충, 자율적이고 유연한 편성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기반 마련
 - ※ 분리편성광고가 사라지거나 중간광고와 동일하게 1분 이내에 종료('21.7월~11월)
- (지상파 UHD 활성화)** 지상파 UHD 방송국 전국망 구축 확대 및 다채널·이동형 혁신서비스 시범방송 추진 등을 통해 고품질 방송 콘텐츠 제공으로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외 방송사업자 간 실질적 매칭기회 제공, 한류 방송 콘텐츠 홍보·판로 확대

2. 미흡한 점

- OTT, 온라인플랫폼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담보와 혁신 성장과의 조화를 위한 규범정립 필요
- 모바일콘텐츠, 개인인터넷방송 등 과다결제·환불거부, 고지미흡 등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II.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OTT·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방송통신 생태계 구조 재편

- 미디어 제작·유통·전송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라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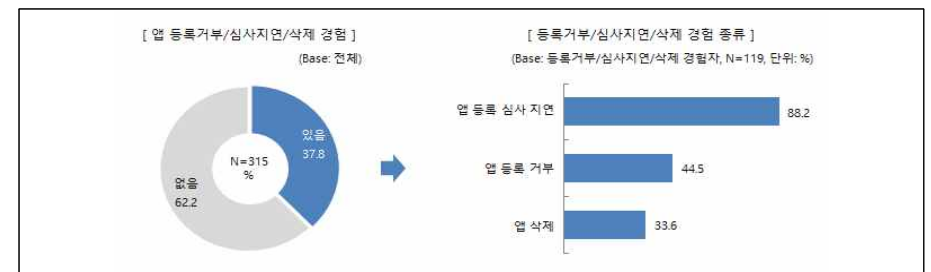
※ OTT 이용률 : ('17) 36.1% → ('20) 66.3%
(자료:202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글로벌 흥행 등 플랫폼의 거대한 영향력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콘텐츠 수익배분의 공정성, 적절한 망 이용대가 지급* 등 이슈 야기

* EU의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 등 13개 통신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통신망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한다는 공동성명 발표('21.11.29., 로이터통신)

- 앱마켓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피해문제 방지를 위해 ICT특성을 반영한 예측가능하고 선제적인 이용자 친화적 규범 정립 필요

* 국내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앱 삭제 등 경험 (방송통신위원회 설문조사, '20.10월~'21.1월)



⇒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시장의 상생환경 조성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② 미디어 매체 간 경계 붕괴(Big Blur) 현상 심화

- 방송·신문 등 기존 매체와 포털·OTT·1인 미디어 등 신규서비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나, 강한 공적 규제를 받고 있는 전통매체와 달리 신규서비스의 경우 확대된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 부족
-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OTT) 등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이용자 관점에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 규제체계로 전환 필요성 증가
 - 공·민영방송의 역할 명확화, 낡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 개선, OTT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필요 최소 규제 및 활성화 지원 근거 등 마련 필요

⇒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의 공적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 마련

③ 온라인 기반 디지털사회 전환에 따른 이용자 피해 다양화·대규모화

- 스마트폰 대중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초고속인터넷·모바일 연결을 전제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활동 증가
 - 초연결 사회 고도화 및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IT 인프라, 통신·인터넷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중요성 증대
 - 온라인 기반 다양한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 및 피해발생 시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
 - ※ 별점후기 제도를 악용한 이용자-중소사업자 간 분쟁,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과다결제, SNS를 통한 명예훼손성 정보 유포 등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인터넷 역기능 동반
 - 온라인·비대면 경제 가속화, 무인매장·키오스크 증가 등으로 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불편이 확대되고 있어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 필요
 - ※ 정보취약계층의 종합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3% 수준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과기정통부)

⇒ 지식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및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는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

III. 2022년 핵심 추진과제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추진 과제

①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방송통신 산업 성장 지원
-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②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 미디어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
- 시청자중심·지역밀착형 방송 고도화

③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제고 및 편익 확대
-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제고

①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개요

-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망 이용대가, 플랫폼 수수료 등 사업자간 거래 시 협상력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방지 등 상생 환경 조성
- 방송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마련)**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사·이용사업자·이용자 다면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규율체계 마련
 - 대규모 플랫폼사의 검색·추천정보 노출기준 공개 및 이용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의무 등 규정,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 금지
 - 법 적용범위, 세부적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 **(앱마켓 규제 엄격 집행)**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세부유형·판단기준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정비·시행(3월)
 -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반기)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사실조사, 행정처분 등 엄격 집행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개선)** 국내·외 OTT 서비스 현황 및 방송-OTT간 제휴사례 등 조사, 방송시장 내 각 단위시장*별 영향(가입자·방송판매출 변화 등) 분석을 통해 미디어시장 공정경쟁 정책 지원(연중)
 - *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② 방송통신 산업 성장 지원

- **(한국 방송 역사 정립 및 발전방향 모색)** 한국 방송 역사 100년을 재조명하고 한국 방송의 기원일 정립* 및 급변하는 방송 환경 하에서 방송의 지향 가치와 발전방향 모색 추진
 - * △1927년/2월/16일 조선총독부 산하 경성방송국 개국일 △1942년/12월/27일 '단파방송 수신사건(경성방송국 조선인 직원들이 비밀리 미국의소리(VOA) 단파방송을 듣고 전황 전파)' △1924년/12월/17일 라디오(무선전화방송) 공개실험(주체-조선일보) 등 검토
-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송사업자 재허가 시 부가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조건 이행점검 등을 통한 투자환경 조성
- **(지상파 UHD 활성화)** '23년까지 UHD 방송국 전국망 확대를 위한 시·군 지역 신규허가 및 수신율 향상 등 UHD 활성화 정책방안 추진
 - 지상파UHD 수신환경 실태조사 및 방송보조국 설치 등 난시청환경 개선 여부 점검, 지상파 UHD의 유료방송 재전송 지원 등 UHD 수신율 향상 추진
 - 다채널(MMS)·이동형 서비스 시범방송 광역권 확대(2분기) 및 다채널 서비스 본방송을 위한 방송법(국회계류) 개정 추진
- **(OTT 해외진출 기반 마련)** 국내 OTT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포럼 개최(4분기) 및 해외 OTT시장·이용행태조사 실시
 - ※ 조사 대상국(3개국) : 아시아 3개국(사업자 의견 수렴 후 확정)
-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주요국의 방송시장 현황 및 미디어 이용행태 등 조사 실시(연중) 및 방송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 개최(3분기)
- **(위치정보사업 규제 합리화)**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허가→등록) 및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위해 개정된 위치정보법(4월 시행) 후속조치 추진(하위법령 개정 등)
 - 위치정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21년 50개사→'22년 60개사) 및 위치정보보호실태 등 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5월~)

- **(본인확인기관 지정 규제 합리화)**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신규 본인 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상반기) 및 변화된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본인확인 심사·평가기준 개선
 - 심사 일정 공고, 불필요한 심사항목 축소, 점수 평가제 도입 등 규제 완화 및 서비스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시 개정·시행(3월~)
-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방안 개선)** 방송시장상황 및 사업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대상 및 비율 등 징수 체계 재검토(고시 개정, 8월)

③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 제고)** 협찬의 정의 신설, 필수적 협찬고지 등 협찬의 투명성 제고 및 제작경비협찬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국회계류) 입법 지원(연중)
 - ※ 지상파·종편채널 방송프로그램과 홈쇼핑 연계편성을 통한 소비자 기만 방지를 위해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점검(9월)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점검 등)** 방송 생태계 전반의 경쟁 심화와 이해관계 복잡화로 초래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제도 정비 추진
 - * 지역민방·경제전문채널 등의 보험 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시청자 정보 유출 관련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21.12월~)
 - 플랫폼-콘텐츠사 간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갈등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및 국회 계류 중인 금지행위 등 관련 방송·IPTV법 개정 추진(연중)
- **(합리적 콘텐츠 거래관행 정착)** 채널계약·평가 개선방안을 담은 유료 방송채널거래절차 가이드라인 시행(1분기) 및 이행점검(~12월)
- **(외주제작 거래환경 개선)**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정기점검(1·7월) 가이드라인 재검토·개정(7월),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문체부 공동, 매년 1회)
- **(망이용 환경 개선)** 망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부당한 차별·조건부과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연중), 개정된 법령을 바탕으로 실태점검 추진(연중)

②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 개요

- 기존 방송과 OTT, 1인미디어 등 신규서비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미디어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 필요
- 공영과 민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추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미디어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 정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
 -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연중)
 - ※ 공영방송사와 협약의 구성·공적책무운영원칙을 협의하고, 협약안 및 방송법 개정안 마련
 - 방송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공성, 매체 간 규제형평 등 미디어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겸영 등 규제 개선 검토(연중)
- **(공영방송 독립성·공정성 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 운영 기반 마련
 - **(지배구조 개선)**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 '21년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면접 절차를 처음 도입하여 방통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 **(수신료 제도 개선)** 수신료 사용·산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신료 회계분리제도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 강화)** EBS 실감형 교육 콘텐츠(AR/VR/XR) 제작 지원('22년, 8.6억원), 전세대 공감프로그램 제작 신규지원 추진
 - ※ 지역밀착형 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등 제작 지원 강화

②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립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 미디어 시장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추진
 -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매체별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통합적 규제체계 마련(4분기)
 - ※ EU·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미디어 관련 통합법 제정 추진 중
- **(광고규제 합리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하여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12월)
 -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 및 시청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형식규제를 폐지하여 방송광고의 자율성 강화
 - ※ 현행 7가지 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광고로 단순화, 일 총량제 및 프로그램 제목 광고 도입 등 광고규제 합리화
 -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따른 시청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법적근거 마련 및 과징금 도입 등 사후규제 강화
- **(편성규제 개선)**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편성 자율성 및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 편성규제 개선 법안 마련(12월)
 - ※ 주된 방송분야 의무편성비를 매체별 일원화,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폐지 등
-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일간 신문구독률 반영, 방송시청행태 다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12월)
 - 문체부*가 정부광고제도 지표 개편안(21.12.1)을 새롭게 마련함에 따라 이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 * (사)ABC협회의 일간신문 부수공사를 언론진흥재단의 일간신문 구독자 조사(구독률·열독률)로 대체하도록 정부광고법을 개정(21.10.)하고 방통위에 협조 요청(21.9.)
 -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규제(30% 상한) 외 스마트폰·PC 등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화 추진
-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국민관심행사(올림픽 등) 시청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법안 마련(12월)
 - * 보편적 시청권을 OTT 등으로 확대, 순차편성 유도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검토

③ 시청자 중심·지역밀착형 방송 고도화

- **(지역방송 활성화)**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역성·다양성의 핵심 매체인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 발전 지원
 - 미디어 생태계 변화 대응을 위해 고화질·AI·AR 등 신기술 적용 콘텐츠 제작 지원 및 OTT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 유통 지원 강화
 - * (21.10월) 왓차·웨이브 69개 콘텐츠 제공 중 → (22) 티빙·네이버 등으로 확대
- **(라디오방송 활성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라디오 매체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 추진
 - AM/표준FM 기능조정(6월), 라디오 통합 플랫폼 개발 지원, 라디오 허가 체계 개선방안 마련, 라디오 지원 특별법(안) 제정 추진
 - (구)경기방송 정파 이후 경기도민의 청취권 확보를 위해 신규 라디오 방송사업자 선정(1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및 심사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및 허가 신청 접수 실시(7개 법인 접수, '21.11.12.)
 - 신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20개)의 개국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 관계부처(방통위, 과기부, 행안부)와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 활성화 지원단' 운영 및 방송시설 구축, 방송운영 기술 교육 등 지원
- **(재난방송 고도화)**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21.8월)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재난방송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MMS) 방식으로 '재난전문채널' 시범 서비스
 - 국지적 재난의 효율적 대응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지자체, 지역 방송사, 방통위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본격 운영을 통해 신속·정확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점검 강화(연2회)
 -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의 방송 품질 향상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등 시설관리기관 대상 방송중계기 교체 지원

③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 개요

- 온라인 기반 서비스 증가로 빠르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진 반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피해 초래
-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 구축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미디어 포용국가 실현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접속 차단 등 모니터링,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차단체계 운영(상시) 등을 통한 유통 근절
 - 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상시), 인터넷사업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 점검 및 보완, 홈페이지 공개(상반기) 추진
- **(불법스팸 규제 강화)**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 협업 모델 발굴을 통한 스팸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불법스팸 전송자 단속을 강화(연중)
- **(팩트체크 활성화)** 팩트체크넷* 활성화를 위해 팩트체커에 대한 활동 지원 확대, 시의성 있는 검증 대상 발굴 강화
 - * 전문가·일반시민의 협업을 통해 팩트체크 과정·결과가 공개되는 온라인 플랫폼
 - 팩트체커 양성을 위한 온라인 팩트체크 전문교육 시스템 마련(하반기), 지자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 맞춤형 팩트체크 시민교육 추진(3월~)
 - 팩트체크 확산을 위한 공모전(팩트체크톤) 개최(9월), 팩트체크 동향 조사·분석 및 홍보 등을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구축(연중)

②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제고 및 편익 확대

- **(온라인 피해구제 강화)**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해결 방안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구축·운영(4월~)
 - ※ 정부·유관기관 등과 효과적인 피해상담 지원을 위해 역할분담, 유기적인 협조방안 마련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예정
 - 이용규모가 급증하는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 확대(3월~)
- **(통신장애 이용자 고지 강화)** 통신 장애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고지방법 개선
 - 이용자 필수 고지수단 확대* 및 부가통신역무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 현재는 다양한 고지 수단(이메일, 홈페이지 등) 중 하나를 사업자가 선택하는 방식
- **(인터넷개인방송 피해 예방)**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과도한 결제 및 불법적 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연중)
 -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에게 불법거래 방지의무 부과 방안 등 검토
-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을 위해 청소년보호 S/W* 보급 확대 추진('21년 2,150개→'22년 2,500개)
 - * 사이버 안심존(이용시간 제한 등), 스마트 안심드림(자살, 왕따 등 키워드 감지 등)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보호 S/W 기능 고도화*(7월)
 - * (스마트안심드림) 디지털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한 음란 채팅, 음란 동영상 감지 기능 추가
- **(앱마켓 이용자보호 강화)** 앱마켓의 모바일콘텐츠 등 결제·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앱마켓 결제·환불 관련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용약관 규정 사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변경 시 사전고지 의무, 앱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민원처리 방법 등을 법령상 규정(3월)

-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원(연중)
 -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1월), 통신서비스 기술·법률 자문단 구성·운영(2월), 통신서비스 품질 검증시스템 도입(3월) 및 통신분쟁해결기준 마련(6월) 추진
- **(단말기시장 규제 합리화)** 자급제 단말기·알뜰폰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안 마련 등 합리적 규율방안 검토(12월)
 -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차별하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방안 검토(4월)
 - 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가지원금 확대(15%→30%)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지원('21.12월 국회제출)

③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및 시청자복지 제고

- **(미디어교육 및 인프라 확대)**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및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미설립된 지역(충남 등)에 센터를 구축하고 인구수·면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역 내 추가 구축 추진
 - 도서산간 지역주민 등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확대('21년 2대→'22년 8대)
 -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제공 및 특수 학교 맞춤형 미디어교육 운영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확대)**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 전반을 포용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디지털 기술 개발, 기반 조성 등 추진
 - 소외계층이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확대, 맞춤형TV 보급 등 접근성 제고(연중)
 - 청각장애이용 자막·수어변환시스템 고도화(연중), 장애유형별 재난정보 대응서비스 및 장애인방송용 디지털 기술표준 도입 등 기술개발 추진
 -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이상),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12월)

IV.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 인앱결제 강제 금지, 협찬 투명성 강화 등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규제완화를 통한 방송통신 생태계 활력 제고



2 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국민의 안전보호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강화,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접근성 강화,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 등을 통해 미디어 포용 국가 실현



3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익 증진

-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 구축, 단말기 추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이용자 피해구제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분쟁조정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

○ 작년에 김씨는 A통신사의 결합상품(전화, 인터넷)을 이용하다 B사로 번호이동을 했는데 A사가 1년 동안 인터넷요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즉시 반환해 달라고 통신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그동안은 수시로 진행경과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고, 시간이 지난 폐일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시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니,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윈스톱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진행상황도 한눈에 알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조정을 처리할 수 있었다.

□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 꽃매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A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을 통해 TV 광고를 할 수 있었다. TV CF를 통해 젊고 스마트한 ‘꽃집000’ 서비스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홍보하여, 40대 이상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2030 소비자들에게도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광고 집행 이후 브랜드 인지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매출 증대로 이어졌으며, ‘꽃집000’ 브랜드가 다른 꽃매달 서비스 브랜드에 비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원

○ 서울에 거주하는 강씨는 인터넷에서 백신을 맞을 경우 유전자변형이 온다는 말이 떠돌고 있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 말들이 사실인지 궁금했던 강씨는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검증 제안을 하였고 전문팩트체커가 연구 사례 등을 근거로 허위정보임을 검증해주어 안심하고 백신을 맞기로 결심했다.

○ 청각장애인 박씨는 코로나19 관련 뉴스보도, 정부브리핑 시 수어통역이 제공되어 코로나19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 또한 백신예방접종 주의 사항, 접종 후 통증관리 등 다양한 행동요령도 알기 쉽게 안내해주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

□ 지상파 중간광고 정비를 통한 시청자 불편 개선

○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TV 프로그램 시청시간이 길어진 박씨는 즐겨보던 예능프로그램이 1부, 2부로 나뉘면서 중간에 오랜 시간 광고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48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서 인위적인 프로그램 쪼개기가 사라지고 이전과 달리 중간에 60초 이내의 짧은 광고가 나왔다. 그리고 광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어 보다 편하게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 미디어접근성 강화

○ 자녀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정씨는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사이트 ‘다모아(www.damoa.or.kr)’에서 편리하게 아이의 지적수준에 맞는 콘텐츠를 검색하여 함께 시청하고 교육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청각장애인 김씨는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더 이상 방송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VOD를 찾아 원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센터 개설을 통한 이용자피해 신속 구제·예방

○ 서울시 동작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최씨는 그 간 일부 고객들이 배달앱에서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구축한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센터」 덕분이다. 악성리뷰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전문 상담사가 허위 리뷰 삭제 요청을 의뢰하는 방법,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안내해주고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단의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제는 악성리뷰에 대한 걱정 없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

○ A씨는 최근 플랫폼사 불만처리 센터에서 식탁 반쯤 완료처리 전화를 받았다. 설치 후 발견된 중대흡결을 배송사·가구사가 서로 모르쇠하는 사이 플랫폼사 윈스톱 불만처리센터에서 신속 해결해준 것이다. 그간 플랫폼사를 믿고 물건을 구매한 이용자라도 문제가 생기면 배송사·입점업체·플랫폼사 간 책임공방에 시달렸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플랫폼사의 이용자보호 의무가 강화되자 플랫폼사가 이용자 권익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 플랫폼사 이용사업자 B업체 역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수익 상승효과를 톡톡히 보게 됐다. 우선 플랫폼사의 상품 노출기준과 이용자 정보, 판매·정산 정보제공 등이 의무화되자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수수료·판촉비 산정은 물론,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졌다. 플랫폼사의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 해지·중단 또는 차별행위 등이 금지되고, 이용사업자에 적절한 수익을 배분할 의무도 생겼다. 플랫폼 협회 신설로 플랫폼사-이용사-이용자 간 상생협력 창구가 개설되었고 정부의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앱마켓 결제수단 선택권 보장

○ 모바일 게임 개발사인 A사는 그동안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 결제 시 앱마켓 사업자가 정한 결제방식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년도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이제는 A사가 원하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결제방식마다 콘텐츠 가격 등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A사의 게임을 즐겨 하는 20대 김씨는 선호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프로모션을 적용 받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생겼다. 앱 마켓에서의 결제방식이 다양화되고 결제방식 간 경쟁도 이루어지면서, 앱 개발사인 A사와 이용자 김씨 모두의 편익이 높아진 것이다.

□ 디지털성범죄물 유통근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20대 박씨는 최근 자신이 불법카메라에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곧바로 해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는 불법촬영물 신고채널을 통해 바로 신고하였다. 이 후 해당영상은 곧바로 삭제되었다.

-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시행('21.12.10.)에 따라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등을 상시적으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불법 촬영물등이 검색결과로 송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미디어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 교육 및 콘텐츠 제공 확대

○ 울릉도에 거주하는 60대 어업인 김씨와 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 박군은 이제 바다와 학교에서 생활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브이로그*로 제작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친지들에게 공유하면서 일상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회관이나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TV프로그램 제작 과정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방법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방문위가 기존에 2대 뿐이던 미디어 나눔버스를 8대로 늘려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역권별로 버스가 할당되고 운행횟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어 도서·벽지까지도 편리하게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

○ 아울러, 청각장애인 이씨는 5%였던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이 7%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각장애인 D씨도 화면해설 재방송 비율이 30%에서 25%로 축소된 덕분에 실시간 방송에서 더 많은 화면해설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구축으로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

○ 중편채널의 오락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하는 60대 여성 유씨는 전에는 방송 시청 중 재난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에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재난 정보를 누락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즉시 안내하여 재난방송이 빠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덕분이다. 유씨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관련 정보를 받아 심각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